

국토정책 Brief

KRIHS ISSUE PAPER



KRIHS POLICY BRIEF • No. 782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강현수 • www.krihs.re.kr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김지혜 부연구위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이재춘 부연구위원

주요내용

- 1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인프라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
- 2 주거지원정책은 신혼부부와 양육가구가 정책에 대한 인지도, 이용도, 만족도 측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임을 고려하여 정책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는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며,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의 이용도가 각각 17.4%, 17.0%로 일반가구(7.4%)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
- 3 주거인프라지원정책은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이용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이를 고려한 인프라 공급방안 마련은 미흡
 - 양육가구의 주거인프라에 대한 이용도는 아파트 거주가구가 비아파트 거주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
- 4 주거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서비스의 종류 및 이용도는 낮은 수준
 - 주거서비스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양육프로그램(19.6%), 무인택배(17.1%), 가사지원서비스(12.0%) 등 양육가구의 주거서비스 이용도는 20% 이하로 여전히 낮은 수준

정책제안

- 1 (주거지원정책 발전방안 도입) 주거지원정책의 대상을 아동이 있는 가구로 확대, 양육에 필요한 주거요소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층 및 세대 혼합을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지원제도의 정책대상 확대 및 금리인하 혜택 제공
- 2 (주거인프라 확충)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주거인프라 공급 확대, 공동주택 내 초등돌봄시설 의무화 추진, 비공동주택에 대한 주거인프라 공급방안 마련
- 3 (주거서비스 확대) 양육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 공공부문의 주거서비스체계를 민간으로 확대, 공동체 중심의 양육서비스 제공
- 4 (양육지원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 부처 간 협력체계 마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1.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 및 구성요소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양질의 주거 인프라·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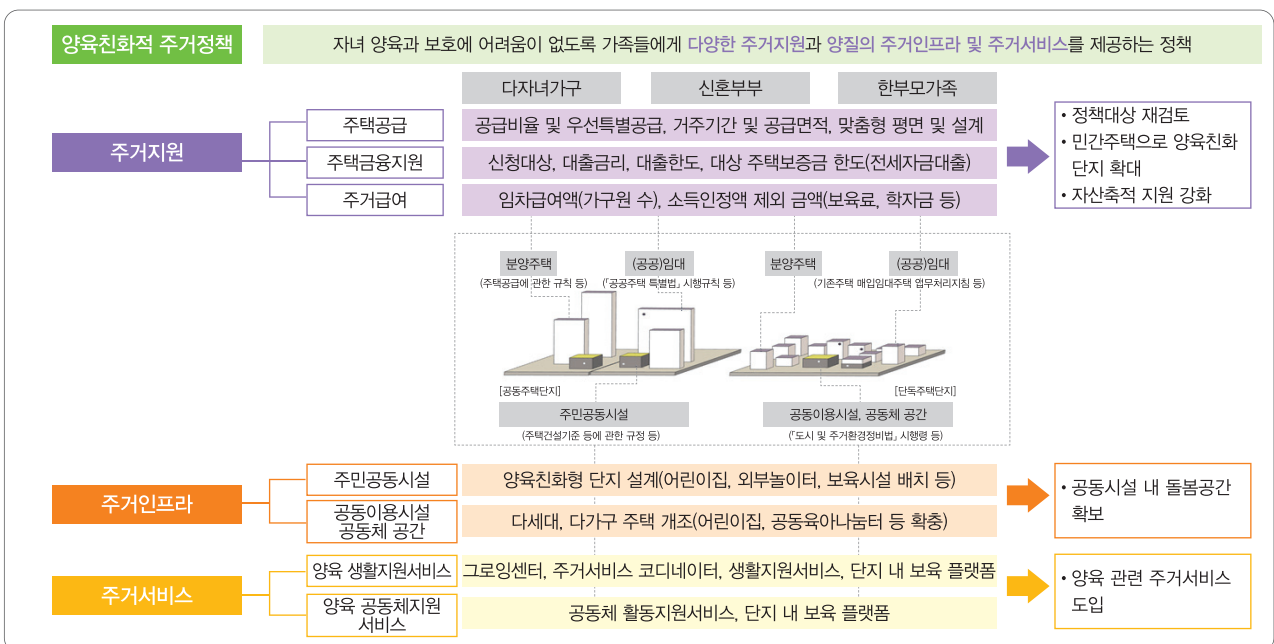
- '주거지원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의 다양한 지원방안을 의미하며, '주택공급'은 공공 및 민간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급비율 배분, 특별공급 우선권 부여, 거주기간 연장 및 공급면적의 확대, 단위세대 특화형 평면 제공 등의 정책지원을 포함
- '주거인프라지원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것으로 양육과정에서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공동이용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이 해당
- '주거서비스지원정책'은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지원받게 되는 주거 관련 서비스를 말하며, 이는 양육생활 및 양육공동체 지원서비스로 구분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공간단위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공간적 범위는 마을단위 공간이 적절하며, 주택유형에 따라 주거인프라 공간단위가 구분

- 마을단위 공간에서 주거인프라의 공간단위는 공동주택의 경우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로 설정하고, 단독주택은 소규모 다기능시설(공동이용시설, 공동체 공간 등)로 설정 가능

그림 1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와 정책현황



출처: 김지혜 외 2019, 72.

2. 주거정책 요소별 지원현황 및 문제점

주거정책 강화를 통해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여건 조성' 필요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으로 '주거 관련 여건'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소득 향상 및 고용 안정(22.4%) 다음으로 주택가격 안정(21.1%),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 양육환경 조성(10.5%) 등이 중요한 사회적 여건으로 분석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양육 관련 시설'의 확대인 것으로 분석

- 양육 관련 시설 확대(35.9%), 부모 및 아동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17.9%), 주택마련 및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17.6%), 양육가구 주거비 보조(16.9%),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11.7%) 순으로 필요하다고 꼽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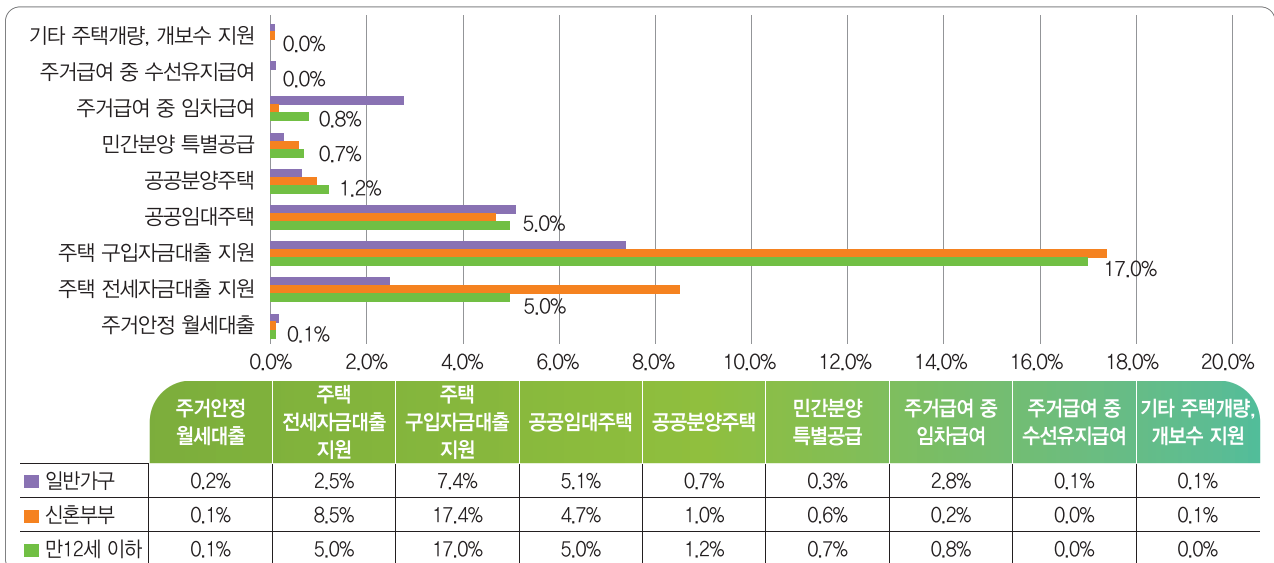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정책대상 가구별 특성 비교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이용도·만족도 측면에서 신혼부부와 양육가구가 유사한 특성을 보임

- (인지도) 일반가구와 비교하여 신혼부부나 양육가구가 '기타 주택개량·개보수'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신혼부부와 양육가구는 유사
- (이용도) 모든 가구에서 '주택 구입자금대출' 지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일반가구(7.4%)에 비해 신혼부부(17.4%)와 양육가구(17.0%)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중
- (만족도)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인 것으로 분석됐으며, 다음으로 '공공임대주택', '주택 전세자금대출' 지원 순으로 확인

그림 2 주거지원정책에 대한 이용도

(단위: %)



주: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양육가구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출처: 김지혜 외 2019, 80(원자료는 '2018 주거실태조사 전수화' 자료).

주거인프라지원정책에 대한 지역별·주택유형별 이용도 비교

주거인프라에 대한 이용도는 아파트 거주가구가 비아파트 거주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적으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

- 지역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양육가구가 중소도시 및 농어촌 거주가구보다 어린이집·유치원, 도서관,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 등 주거인프라에 대한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양육가구가 비아파트 거주가구보다 공동육아나눔터와 주민자치실을 제외한 모든 양육 관련 주거인프라 이용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1 주거인프라 이용 여부

(단위: %)

구분	전체	지역			주택유형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아파트	비아파트
어린이집·유치원	56.7	54.6	58.6	57.0	58.1	53.0
야외활동 가능한 장소	42.8	38.9	44.6	47.3	44.9	37.2
방과후 공부방(초등돌봄)	19.5	17.3	19.4	25.1	19.6	19.3
실외놀이터	76.1	73.9	78.4	75.5	79.9	65.9
도서관	55.4	50.9	57.6	60.2	57.9	48.7
실내놀이터(키즈카페)	47.8	46.2	49.5	47.4	48.8	45.2
운동시설(피트니스)	32.0	29.8	34.4	30.9	37.1	18.1
공동육아나눔터	6.6	6.5	5.8	8.8	6.4	7.1
주민자치실	29.6	25.2	33.0	31.0	29.3	30.5

주: '이용 여부'는 주거인프라(주거지원시설) 이용 여부에 대한 응답문항 중 '① 예' 라고 응답한 수의 비중임.

출처: 김지혜 외 2019, 83(원자료는 본 연구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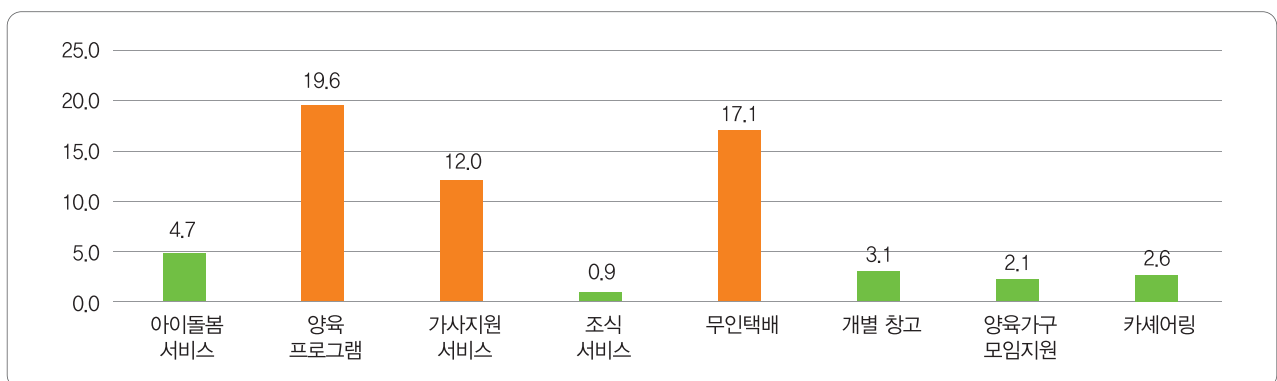
주거서비스지원정책에 대한 이용도 비교

주거서비스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실제 양육가구의 주거 서비스 이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

- 양육 관련 주거서비스에 대한 이용도는 대체로 2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육 프로그램 19.6%, 무인택배 17.1%, 가사지원서비스 12.0% 순으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

그림 3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에 대한 이용도

(단위: %)



주: 신혼부부는 혼인한 지 7년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양육가구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를 의미함.

출처: 김지혜 외 2019, 85를 참고(원자료는 본 연구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강화방안 설문조사' 결과)하여 연구진 작성.



3.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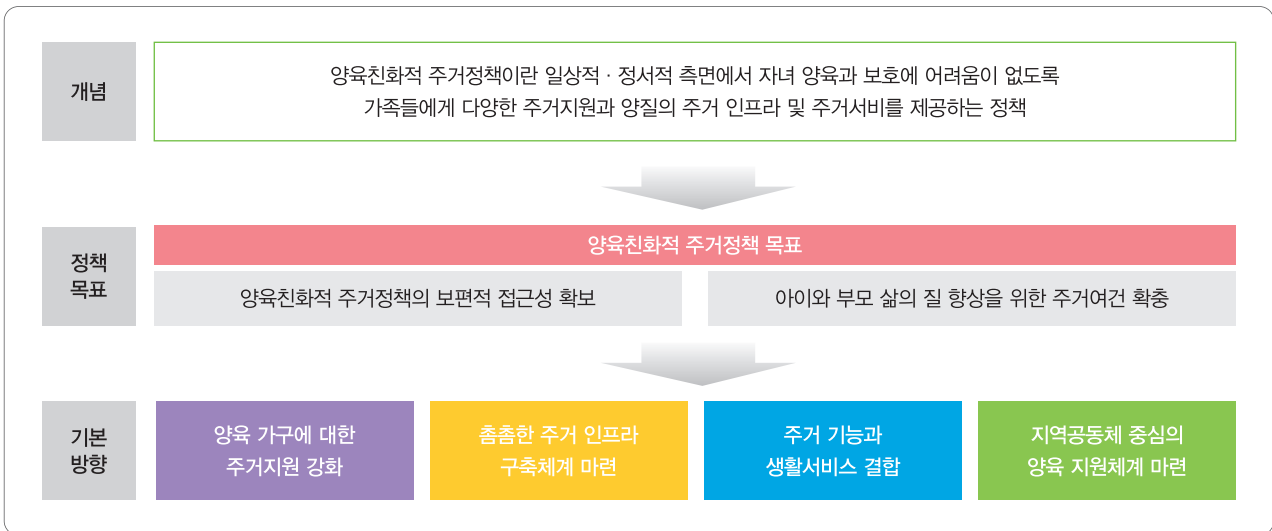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정책 목표) 양육가구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의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양육친화적 주거 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아동과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여건을 확충

(기본방향)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주거여건 확충을 통한 아이와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 설정

-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아이 키우기 좋은 촘촘한 주거인프라 구축체계 마련, 주거기능과 생활 서비스의 결합, 지역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체계 마련

그림 4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출처: 김지혜 외 2019, 151.

주거지원 정책대상 확대 및 양육가구 수요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거지원 정책대상 확대

- 다자녀 가구의 요건을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로 조정
-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

양육에 필요한 주거요소를 반영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 (입지) 공공임대주택의 입지와 위치는 학교나 학원 등의 교육시설 인근이거나 역세권 위주로 공급
- (면적)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공급평형의 다양화
- (임대료) 입주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보증금은 시세 대비 80%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주거인프라 공급 확대

공동주택 내 초등돌봄시설 의무화 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신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의2 제3항)의 개정을 통해 주민공동시설로서 '방과후 초등돌봄시설'의 의무화 추진
- 기존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존 주민공동시설의 '방과후 초등돌봄시설'로의 용도기준 완화 등을 검토

비공동주택(단독·다세대 등)에 대한 주거인프라 공급방안 마련

- 기초생활인프라에 대한 국가 최저기준을 고려하되, 지역현황에 따라 별도의 지역단위 최저기준 마련
- 양육 관련 주거인프라가 국가 최저기준에 미달 시 '도시재생인정제도'를 활용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양육 관련 주거서비스 개발 및 공동체 양육서비스 지원 확대

주거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 및 공동체 형성, 양육 관련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간을 양육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가정순환형 돌봄, 외부활동 연계형 돌봄 등으로 서비스의 공간범위와 내용을 확장
- 공동체 중심 양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동체 형성 관련 교육 실시 및 양육전문가 적극 양성

양육지원정책의 효율적 연계 및 정보제공 강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부처 간 협력체계 마련

- 각 부처의 전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부처 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필요
- 중장기적으로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의 연령대별 정책 사각지대 및 실질적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양육 관련 서비스와 인프라 제공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관련 부처에서 제공하는 모든 양육지원정책의 정보를 포함하되, 대상은 아동뿐 아니라 부모도 포함
- 이용자 간 정보교환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보 플랫폼 개선과 양육정책 보완에 활용

※ 본 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한 '김지혜·이재춘·이길제·김정인·조한진, 2019.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친화적 주거정책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정리한 것임.

김지혜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kjh@krihs.re.kr, 044-960-0331)
이길제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gjlee@krihs.re.kr, 044-960-0296)
이재춘 주택·토지연구본부 부연구위원(jclee@krihs.re.kr, 044-960-0330)

